

# 택시·오토바이 과속 잦아…대학, 규제 방안 마련 중

김권수 기자 okb8888@khu.ac.kr

【서울】서울캠퍼스 안에서 운행하는 차량으로 위험한 교통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현행법상 대학교 캠퍼스는 사유지로 분류돼 도로교통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캠퍼스 내 도로에서 인명 사고가 발생할 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만 적용받아 형사처벌은 가능하나 벌점이나 범칙금, 면허 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처분은 내릴 수 없는 실상이다. 총무관리처에 따르면 현재 우리학교의 자체적인 교통규제 혹은 처벌에 관한 규정은 없다. 사실상 캠퍼스 내 위험 차량을 통제할 수 없는 것이다.

캠퍼스 내 통행 차량은 택시, 승

용차, 배달 오토바이, 통학버스, 화물차, 전동 킥보드 등이 있다. 취재 결과, 위험 원인은 ▲과속 ▲역주행 ▲노면표시(방향) 부실이다.

미술대학 언덕길과 신축 space21관 앞 언덕길 등 차량 통행이 많은 곳에서 직접 속도를 측정한 결과, 학내 권장 속도 30km/h가 쉽게 초과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통행 관리에 나서는 주차유도원은 “특히 택시와 배달에 나서는 오토바이의 경우 과속운전이 자주 목격되며 야간에는 대부분 차량이 더 과감하게 운전한다”고 전했다.

다른 외부차량의 경우, 과속과 더불어 역주행을 목격할 수 있었다. 특히 교시탑 부근은 정해진 방향을 지키지 않고 역주행하는 차량이 많



서울캠 안 교통문제 (사진=김권수 기자)

이 보였다. 이는 오토바이, 전동 킥보드 등에서 많이 나타났다.

이 외에도 노면표시 부실 문제로 차량 간 사고 위험이 존재한다. 차선 간 노면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거나 오래돼 희미한 표시들은 운전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가령 신축 space21관 언덕길을 지나 한의대 건물 방향을 지날 때, 차선을

구분하는 노면표시가 평지에서 끊겨 올라오는 차량과 내려가는 차량 간의 추돌 가능성이 존재한다.

임현호(외식경영학 2020) 씨는 “호텔관광대학과 생활과학대학 사이 미술대학 방면의 가파른 골목길을 건너려는 순간 빠른 속도로 경희초등학교 버스와 승용차가 지나갈 때 자주 놀라며 추돌 위험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주차 요원 분들이 있음에도 보행자가 워낙 많은 곳이고 초등학생의 하교 시간과 맞물려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전했다.

이에 따른 주차유도원의 통제 또한 애로사항이 많은 상황이다. 주차유도원 김봉용 씨는 “간혹 이어폰을 착용한 학생들은 통제를 듣지

못해 차량이 내려오는 중에도 보행을 하는 등 위험천만한 상황이 생겨나기에 주의를 기울여 통제하고 있다”고 전하며 사고 예방을 위한 캠퍼스 이용자들의 주의 역시 강조했다. 또한 “보행자의 안전은 물론 학교를 잘 모르는 분들은 길을 잘못 드나드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노면표시 복구와 표지판 설치 필요성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통행 문제에 총무관리처는 “캠퍼스 내 과속, 역주행 등을 규제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 중에 있다”고 전했다. 이어 “대학 내 자체적인 해결책으로 운전자들의 과실에 대해 패널티를 부여함으로써 출입에 제한을 두고자 한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 확정된 총장 선임제, 구성원 의견은

박상희 기자 smtg7475@khu.ac.kr

박서현 기자 parkseohyun@khu.ac.kr

확정된 제17대 총장 선임제에 구성원들의 반응이 다양하다.

확정된 총장 선임제는 초빙, 공모, 후보자 추천, 숙의·자문, 후보선정, 심의, 의결을 골자로 한다. 구성원 대표가 합의한 안과 다르게 후보를 압축하는 과정에서 구성원 직접 투표가 배제됐고, 그 역할을 숙의 단계로 대신한다.

우리신문 취재 결과, 일부 구성원은 확정된 총장 선임제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A 교수는 “이사회와 이사장에게 모든 실질 권한이 집중된 제도”라며 “추천권은 당연히 구성원에게 있어야 하며 최종 후보 2인 정도를 선출하는데 구성원이 직접 참여하는 것이 민주적 절차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B 교수는 “4년 전에 많은 진통을 겪어 가며 구성원 전체 투표까지 포함한 총장 선출 방안을 결국 마련해 시행했는데, 갑자기 4년 전의 선출 방안은 폐기하고 이사회에서 새로운 안을 내놓는 이유를 듣지 못했다”는 의견을 냈다.

C 교수는 “4년 전 총장선출안에 비해 학내 구성원 참여가 제한된 퇴행적 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사회를 제외한 구성원에게는 추천권만 주어지며 결정권은 이사회가 모두 가지고 있다”며 “왜 구성원을 들러리로 세우는지 모르겠



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 교수, 직원이 힘을 합쳐 우리학교 민주화의 퇴행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D 교수는 “지금의 총장 선임제에 민주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으나 민주성 정도가 미미하다”고 전했다. 그 이유로 “총장 후보 숙의위원회 위원 9인 중 과반인 5인을 이사와 이사회가 추천하는 전문가로 배치해 법인의 총장선출권을 확실히 하고 대학의 다른 구성원에 미약한 참여권 혹은 자문권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재학생 E 씨는 “학생을 비롯한

구성원이 최종적으로 총장을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추천 후보를 올리기 위해 선임 방식을 진행하는 것은 ‘총장 후보 추천제도’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 교원, 직원, 동문 어느 구성원도 만족하지 못하는 안이 나오게 된 경우에는 숙의를 거치지 않고 제도가 급하게 만들어진 것이 원인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숙의 과정의 긍정적인 측면에 주목하는 의견도 있었다. 졸업생 F 씨는 “단순히 투표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사실보다 더 깊은 숙의가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보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F 씨는 “단순 대표자가 아니라 학교 발전을 이끌 사람을 뽑아야 하는데, 선거가 이뤄지게 되면 대표해서 나온 사람이 자신이 소속된 집단의 몰표를 받아 총장으로 선출될 우려가 있다”며 “이번 과정은 총장 후보 추천 위원회에서 후보를 추천하고, 총장 후보 숙의 위원회에서 전문가가 심의해 법인에서 선택할 수 있는 총장 후보군을 추천하기에 단순 투표보다 숙의 과정이

추가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제17대 총장 선임제 확정을 보도한 우리신문 기사(이사회, 제17대 총장 선임제 확정/대학주보 1711호/2023.10.30.) 댓글에 “그래도 학생, 교수, 직원, 동문이 법인 이사들과 과도 그랑고 상호 간에도 총추위에서 같은 비율을 갖는다는 건 꽤 큰 발전”이라는 내용도 있었다.

재학생 G 씨는 “이번에 구성원 투표 행위는 없지만 총장 후보 추천 위원회에서 학생, 법인, 교수, 직원, 동문 각 인원이 동일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투표 행위가 없다는 점을 아쉽게 볼 수도 있으나 제16대 총장 선거는 사실상 학생 비율이 유의미하게 크지 않았다”고 말했다.

교수의회 김도균 의장은 “교수 사이에 다양한 의견이 있었고 의장단 안에서도 이 방식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직선제를 쟁취하지는 중요한 의견도 나왔지만 대행 체제는 피해야 한다는 의견을 구성원 다수가 표현했고 이사회 의견도 중요하다”며 “학교 발전을 위해 지금의 방식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됐기에 이런 결정을 하게 됐다”고 전했다.

김 의장은 “다만 구성원 의견 수렴을 위한 시간은 충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사회는 구성원 간 담화가 열린 지 사흘 뒤인 지난달 26일 최종안을 확정했다.